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I 2단계 정책 필요성

II 2단계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III 2단계 정책 주요내용

IV 향후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I 2단계 정책 필요성

1. 추진배경

1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지방발전 전기 마련

1단계 정책은 공공부문 주도의 다핵형 국토발전 및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발전기반 강화에 역점

2단계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의 발전동력 확충

●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2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



● 수도권 집중도(2000년) : 영국 12.2%, 프랑스 18.7%, 일본 32.6%, 한국 47.2%

1. 추진배경

3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종합적 계량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07.7월)



*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및 인프라 5대 부문의 2005년도 지표를 분석

외국의 정책사례... EU, 영국, 프랑스, 태국 등도 지역분류 및
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해 균형발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II 2단계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1. 정책비전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

2단계
(민간부문)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1단계
(공공부문)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기업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경제 기반 강화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지역 R&D 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 육성

2. 추진과제 : 2대부문 14개 과제

정책부문	기업대책	사람대책
정책과제	●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 인력난 해소 ● 산업용지 공급 확대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고품질 주택 공급 ●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 지방재정 배분 시 낙후도 반영 확대

3. 추진전략

1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

1단계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발전 동력 확충

2

지방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 일극 집중 극복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 유인 제공

3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지원

기업과 함께 지방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생활여건 제공

4. 추진전략

4

지역분류 제도화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기초단체의 인구·경제력·재정력·복지·인프라 5대부문의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



구 분	지역 I (낙후지역)	지역 II (정체지역)	지역 III (성장지역)	지역 IV (발전지역)
-----	----------------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Ⅲ 2단계 정책 주요내용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1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지역분류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감면 및 최저한세를 적용 배제

- 중소기업 : 지방기업에 기간 제한없이 차등 감면(30~70%)
- 대기업 : 지방이전 15년, 지방창업 10년간 차등 감면

	현행	2단계안
중소기업	● 창업 : 4년 50% 감면 ● 이전 : 5년 100%, 2년 50% 감면 ●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08년말限) 수도권 10~20%, 지방 5~30%	● 창업·이전·운영·통합 ● 지역별로 차등 감면 지역Ⅰ : 70%, 지역Ⅱ : 50%, 지역Ⅲ : 30%
대기업	●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 이전시 최초 10년: 70%□50%□30% 감면 이후 5년: 35%□25%□15% 감면 ● 창업시 최초 7년: 70%□50%□30% 감면 이후 3년: 35%□25%□15% 감면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2

인력난 해소

지방기업의 기술 전문인력 확보 지원

- ◎ 지방기업의 전문기술 심화 및 신기술 교육 지원 확대
- ◎ 지방 중소기업 자체 R&D 역량 강화 및 기술 전문인력 공급 확대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 제도 도입

- ◎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춘 계약형 학과 등 집중 지원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 ◎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 현행 기준 + 20%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3 산업용지 공급 확대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확대

- ⊙ '08년부터 10년 동안 330만 m^2 규모의 임대산업단지 공급(연간 33만 m^2)
- ⊙ 혁신도시내 초장기 임대 산업단지 78.5만 m^2 공급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

- ⊙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
- ⊙ 국무총리 소속 '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 를 두어 규제 일괄 처리
-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지원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4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방에 외자유치 확대

- ◎ '07년 하반기 중 지정요건·기준 등 마련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출기업 및 지역경제 육성

- ◎ '08년 상반기 중 2곳 추가 지정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 이전 시 상업적 도시개발 허용

- ◎ 지방이전 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 신설

- ◎ 종업원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규모(100만~330만㎡) 차등화

- 시행자의 개별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및 개발이익 환수비율 인하 방안 검토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6 대기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 규제 예외 허용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07.6.22)

7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방이전 / 투자에 따른 상담·민원서비스 제공
- ⊙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하여 종합지원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 ⊙ 50인 이상→30인 이상 기업
- ⊙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고보조비율 차등화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

고품질 주택 공급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

- ◎ 거주기간,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완화
- ◎ 지방 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2년→5년) 연장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

- ◎ 지방 이전기업이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지방 이전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

- ◎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지원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2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지역의 초중학교를 지역 복지거점학교로 육성

- 특기·적성교육 및 지역사회의 문화·복지·학습 거점으로 활용

지방 우수고교 육성

-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고 육성(140개교)
-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41개교)
 -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자율권 부여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학생 참여율 제고

- 프로그램 전문화 : 예체능, 과학, 논술 등 교사 아웃소싱 확대
- 지방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을 대폭 제고(45%→60%)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3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

- ② 이공계 장학금 지방대학생 지원비율 확대(49%→65%)
- ② 인문사회계열 지방대학생 장학제도 신설



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

- ② 학생전용 임대주택 건설 지원제도 신설
 - 사립대학에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건설규제 완화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② 기업의 연구개발설비 및 맞춤형 교육비용 기부금에 세액공제 추가 지원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국가출연연-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지원

- ◎ 지역발전 중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 지방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 주관으로 「전략적 제휴」 공모사업 추진
 - 인적교류 제도화, 맞춤형 교육, 연구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지역 특화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 ◎ 지방대학 특화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단」 지원
 - 국가,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 협동연구 역량 강화
- ◎ 지원분야
 - 국가·지자체 수요(70%) : 10대 성장동력사업, 21개 서비스분야, 지역전략산업
 - 대학 자체 수요(30%) : 지역특화, 균형발전 등 인문사회분야 등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4

선진형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

- ◎ 지방국립대 병원 : 3차 전문·특화의료기관
 - 지방국립대 병원의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질환 관리 및 진료
 -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 ◎ 지방의료원 : 2차 지역거점 의료기관
 - 지역 재활센터·응급의료센터, 만성질환 관리·예방, 출산양육 등 중점 지원
- ◎ 지역보건소 : 1차 지역 의료건강센터로 발전·강화
 -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재활보건, 방문보건 등 중점 지원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 ◎ 주민건강정보 DB 구축, 방문검진, 응급의료 지원 등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 ◎ 권역별 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 구축
 - 전국을 50개 중 진료권으로 나누어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기능 강화
 -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6개 중 진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설
- ◎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지원체계 구축
 - 13개 지방 시도 특성화 응급센터 지정·운용(72개소)
 - 중환자용 구급차(Mobile ICU) 226대 배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분 대폭 감면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

- ◎ 혁신·기업도시 내 개방형 자율학교(15개교) 우선 지정
- ◎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의 국립공고를 특성화 전문계고(25개교)로 육성

문화·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 ◎ 문화·예술 등 국립시설을 혁신·기업도시에 집중 배치 유도
- ◎ 문화·예술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하여 개발계획 승인

보육·노인복지·의료시설 집중 지원

- ◎ 노인요양시설 우선 설치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강화 지원



2. 사람대책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6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 ◎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

✱ 07년 사회개발 지출비중 : 36.2%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

- ◎ '08년 낙후도 요소 반영비중 확대(60%→70%)
- ◎ 재정력 지수,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을 확대되도록 배분기준 개선

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 ◎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 대폭 확대
-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IV 향후 계획

IV. 향후 계획

2007. 07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 발표

2007. 08

●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2007. 09

● 법안 국회 제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편으로는 치마찬가